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작년 12월 이후 최저. 통화긴축 완화 기대 증가
 - EU,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회복세 지속.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 등이 반영
 - OPEC+, 내년 글로벌 원유수요는 금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1.1%], 금리 하락[-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강세 및 미국 소비자물가 둔화 등으로 1.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9%, 1.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장기화 전망 후퇴 등으로 큰 폭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288.3원, -17.7원) 1.2% 하락, 한국 CDS 하락

주 가					환 율					
		12/13일	12/12일	전일대비			12/13일	12/12일	전일대비	
	미국	4,019.7	3,990.6	0.73%	국채금리 10y	미국	3.50%	3.61%	-11bp	
	유럽	442.60	436.98	1.29%		독일	1.93%	1.94%	-1bp	
	중국	3,176.3	3,179.0	-0.09%		영국	3.30%	3.20%	10bp	
	일본	27,955	27,842	0.40%		CDS 5y	한국	50bp	53bp	-3bp
	한국	2,372.4	2,373.0	-0.03%			중국	69bp	74bp	-5bp
	달러지수	104.02	105.13	-1.06%	위험지표	EMBI+	-	376	-	
	유로화	1.0633	1.0537	0.91%		VIX	22.55	25.00	-9.80%	
	엔화	135.59	137.67	1.53%		WTI유	75.39	73.17	3.03%	
	위안화	6.9517	6.9776	0.37%	원자재	구리	384.4	379.9	1.18%	
	원화	1,306.0	1,307.2	0.09%		금	1,810.8	1,781.4	1.6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작년 12월 이후 최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증가

- 11월 소비자물가(CPI)의 월간 상승률은 0.1%를 나타내 전월(0.4%) 및 예상치(0.3%) 대비 낮은 수준. 연간 상승률 역시 7.1%로 전월(7.7%) 대비 하락하며 '21년 12월 이후 최저. 근원 CPI도 월간 및 연간 상승률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각각 0.3%→0.2%, 6.3%→6.0%)
- 항목별로는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에너지(-1.6%), 중고차(-2.9%), 항공료(-3.0%), 의료서비스(-0.7%) 등이 하락한 반면 식품(0.5%), 주거비(0.6%), 의류(0.2%) 등은 상승. 특히 CPI 가중치에 영향이 큰 주거비 상승률은 4개월래 최저
- 다만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임금 상승 압력이 상당하기에 연준이 보다 확실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존의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견조한 노동시장 덕분에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 물가 전반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Inflation Insights의 Omair Sharif). 11월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 2월 FOMC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 중단을 언급할 가능성도 존재(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준은 연방기금금리(현재 3.75%~4.00%)를 12월에 0.50%p,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0.2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그리고 내년 11월과 12월에 각각 0.25%p의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는 정상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첨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부동산중개협회(NAR), 내년 기존주택 판매는 고금리 등으로 감소 예상

- 기존주택 판매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513만채, 478만채를 기록할 전망. 다만 기존주택의 가격은 공급부족 등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

■ EU,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의회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 시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며, 이르면 '26년부터 시행할 전망. 이는 환경개선에 일조하지만,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을 갖고 있어 무역장벽이 될 소지

■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회복세 지속.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 등이 반영

- 12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23.3으로 전월(-36.7) 대비 올라 3개월 연속 상승.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시장의 안정 등도 향후 경제 전망에 긍정적 시각을 유도(ZEW의 Achim Wambach)

■ 영란은행, 내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이 가계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

-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실질소득 감소, 모기지 비용 증가, 실업률 상승 등이 가계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 다만 전반적인 가계 재무상태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나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이번 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연기. 코로나 19 확산 등이 영향

-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가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향후 일정은 모두 미정. 그 동안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성장촉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완화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

■ OPEC+, 내년 글로벌 원유수요는 금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내년 일일 글로벌 원유수요는 금년에 비해 225만배럴(2.5%) 증가할 것으로 추정.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 세계 경기회복 등이 원유수요 확대에 연결될 전망이며,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13 현지시각 기준)

- 독일 11월 소비자물가(확정치, 전년동월비): 11.3%, 10월(11.6%), 속보치(11.3%)

■ 주요 경제 이벤트(12/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FOMC 및 11월 수입물가,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분명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발신 - WSI

(Inflation's Cold Case)

-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도 작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주목할 항목은 주거비 중 임대료. 임대료는 물가항목에 늦게 반영되는 특징을 감안하면, 향후 하락세 지속이 예상
- 공급망 문제 완화, 소비수요 감소, 소매업체의 높은 재고 수준 등은 상품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인건비 상승이 서비스 가격 상승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

■ EU의 새로운 세제,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에 부정적 - WSI

(The Climate Trade War Escalates)

- EU는 자체적인 법인세율 하한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제를 발표. 이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최저 법인세율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 또한 아직 관련 제도 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업의 투자결정을 어렵게 할 소지
- 탄소국경세의 경우 탄소거래제도를 면제 받았던 기업들에게 에너지 비용 부담을 확대시켜 투자가 축소될 위험이 존재. 또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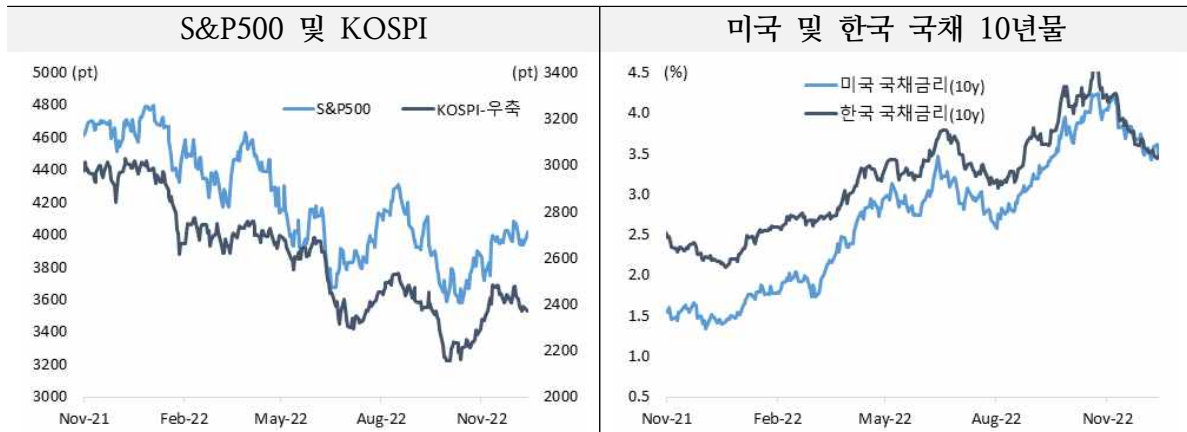
■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EU 회원국 간 대립을 심화시킬 우려 - 블룸버그

(Price Controls Won't Help Europe Keep the Gas On)

-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위기 이전 대비 7배 수준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가격 상한제를 대안으로 제시. 그러나 가격 상한제는 공급자들의 이윤을 감소시켜 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측면에서도 감축 효과가 낮아 부족현상을 심화
- 이에 취약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또는 부문별로 평균 소비량을 도출한 이후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가계 80%, 기업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
- 그러나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과도한 정부부담을 이유로 해당 방안들을 거절하고 에너지 기금 설립을 요구. 가격 상한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질 소지

- **미국 주요 기업의 내년 이익증가율 전망, 과도하게 높은 수준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An earnings recession without an economic one)
 - '23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 S&P 500 기업의 연간 이익증가율 시장 컨센서스는 5.5%. 이는 다소 높은 수준의 물가가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 내년 순이익률 역시 금년 대비 상승(12.0%→12.3%) 예상. 이는 '08년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
 - 그러나 과거 경기침체 시 매출의 소폭 감소도 비탄력적인 고정비용 등으로 이익의 큰 폭 감소를 초래. 이에 더해 임금상승 등에 따른 고정비용 부담 증가와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판매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가능성도 존재
- **영국의 공공부문 임금,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위해 인상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UK government's policy on public sector pay is foolish)
 - 영국 정부가 공공부문의 높은 급여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도 파업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재정연구소(IFS)는 공공부문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면 해당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 특히 '10년 5월 보수당 집권 이래 민간부문의 실질 평균급여가 5.5% 증가한 반면, 공공 부문은 5.9% 감소
 -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요구. 간호사의 구인율(vacancy rate)은 '21년 9월 10.5%에서 '22년 9월 11.9%로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의 악화로 연결
-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 부담 확대를 초래 - 블룸버그**
(The Real Risk of Higher Inflation Is Lower Wages)
- **미국 고수익 채권, 금리상승 등으로 향후 2년간 채무불이행 증가 예상 - Financial Times**
(Defaults on US junk loans expected to climb as rate rises squeeze earnings)
- **'23년 미국 주택가격, 수요 우위 지속 등으로 하락 가능성은 낮은 편 - 블룸버그**
(Waiting for Home Prices to Drop? Bad Strategy)
- **엔론 사태 후속조치, FTX 사태 재발 방지가 신중히 마련되어야함을 시사 - WSJ**
(The Meaning of the Bankman-Fried Indictment)
- **중국의 코로나 19 규제완화, 감염확산에 의한 경제활동 부진 위험 상존 - 블룸버그**
(China's Post-Covid Reopening Comes With Ri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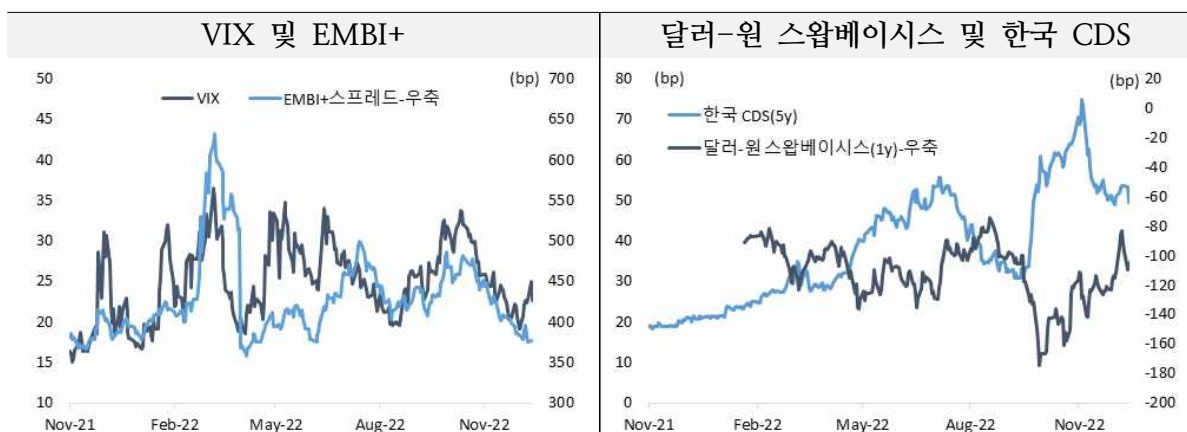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